e-Journal *Homo Migrans* Vol.8 (June 2013): 80-84

연구노트

# ‘피해자 독일인’, ‘가해자 폴란드인’? 독일의 강제추방반대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을 둘러싼 독일-폴란드 갈등

오 승 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독일에서 <강제추방 반대 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전역에서 추방된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독일 실향민들의 삶을 기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센터>이다. 그런데 독일 실향민들을 위한 센터 건립을 바라보는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못하다. ‘베트라이벤(Vertriebenen)’이라 불리는 독일 실향민들이 역사의 희생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들을 불행으로 이끈 역사적 질곡의 책임이 자칫하면 동유럽 사람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동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추방의 원인은 독일이 주도해서 일으킨 2차 대전과 동유럽 침공에 있다. 독일의 침략과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의 이중 침공으로 전체 인구의 1/4(인구 2,400만 중 600만 사망) 하여 전체 인구의 1/4을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폴란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야말로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의 가해자성이 아닌 피해자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실향민들의 시도는 역사적 진실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실향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사회와 동유럽 사회가 서로

자신들의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난 세기 시작된 왜곡된 역사의 잔재에서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과 대면하게 된다. 역사의 이름으로 야기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질곡 된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 노트에서는 일단 전통적 희생자로 간주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강제추방 반대 센터> 건립 문제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 *Ⅰ. 강제추방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과 독일-폴란드 갈등*

근대 유럽에서 강제이주는[1] 주로 동유럽에서 발생했지만, 강대국 독일도 예외적으로 대량 강제이주를 경험한 바 있다. 2차 대전 패전 직후 12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동유럽에서 추방되어 본국으로 쫓겨 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강대국들이 합의 하에 독일-폴란드-소련 간 국경선(the Curzon Line)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 추방이 이루어졌다.[2] 소련의 도움으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연합국이 스탈린의 요구를 받아들여 폴란드의 동쪽 지역은 소련에 내주고, 대신 패전국 독일의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 내어주는 영토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에서 살던 약 400만으로 추정되는 독일인들이 현재의 독일 국경선 안으로 강제 이주 당했으며, 폴란드 사람들은 떠나는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

---

1) 근대 이후 동·서 유럽 간의 이주를 유형별로 구분해봤을 때, 가장 많은 이주는 민족적 이유(ethnic migration)에서의 이주로 나타났다. 19세기 이후 특히 동유럽에서 벌어진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강제추방과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이동이 많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체 이주의 75%를 차지하는 민족적 이유에서의 이주는 15%를 차지한 노동이주 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다.Heinz Fassmann & Rainer Mũnz, "European East-West Migration, 1945-1992," *International Migration Reveiw*, Vol.28, No.3(Autumn 1994), 520-538

2)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커즌 라인Curzon Line'이라는 새로운 폴란드 동부 국경이 정해지면서 전쟁 전 폴란드 영토의 절반 정도가 소련으로 편입되었다.

그간 이들 2차 대전 독일 실향민들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체 독일 사회에 재정착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은 '독일 실향민 연맹(Bund der Vertriebenen, BdV)'이었다. 그러나 '독일 실향민 연맹'은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요구로 지지나 지원을 받기 보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차 대전 이후 새로 확정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던 땅을 돌려달라거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행동을 해왔다. 이 '연맹'이 2000년 9월 6일 발표한 '실향민 반대 센터수립을 위한 재단(Stiftung Zentrum gegen Vertreibungen, ZgV)' 설립 계획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단'을 통해 2차 대전이후 동유럽에서 강제추방당한 독일인들에 관한 기록보관을 위한 <강제추방반대 센터(Zentrum gegen Vertreibungen)>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주도한 것은 나중에 기민당 국회의원이 된 슈타인바흐(Erika Steinbach) '연맹' 회장으로, 그간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추방반대센터> 설립 계획은 적어도 독일 사회 내에서는 초기의 비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전후 독일 역사에서 강제 추방당한 자국민들(Vertriebenen)의 문제를 비롯한 독일 희생자들 문제는 금기시 되어왔었다. 나치 독일=가해자라는 역사인식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전역에서 팽배한 상황 하에서 적어도 일부 독일인 희생자도 존재함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판적이던 귄터 그라스 같은 좌파 지식인들조차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비판적 독일 공적 담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3] 기존의 독일인=가해자라는 등식을 깨고 독일인도 피해자의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많은 비판 속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후 서서히 나타난 독일 역사인식 상의 변화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3) Pawel Lutomski, "The Debate about a Center against Expulsions: An Unexpected Crisis in German-Polish Relations?", German Studies Review, Vol.27, No.3, 2004, 450.

그러나 독일 <강제추방반대 센터> 수립 계획은 폴란드와 체코 등 이웃 국가에서 분노를 폭발시켰다. 폴란드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판과 공격이 쏟아져 나왔고, 독일 센터를 빗대어 '화해에 반대하는 센터(Center against Reconciliation)'라고 불렀다. 독일=가해자라는 등식의 파괴는 이웃한 동유럽 사회에 널리 퍼진 동유럽=나치 독일의 피해자라는 등식이 깨져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의 역사 인식 속에서 보면, 독일인들이 추방된 것은 나치가 일으킨 전쟁과 그로 인해 폴란드 사람들이 입은 훨씬 더 많은 피해에 대한 응분의 대가일 뿐이다. 또한 2차 대전 후 연합국과 소련간의 합의에 따른 국경이동으로 폴란드인도 149만 명이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면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이 추방된 것이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며, 강제추방반대센터는 이러한 맥락을 오히려 뒤집어 놓을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추방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Ⅱ. 해결책은 범유럽 차원의 추방 반대 센터?*

2008년 이후 그간 답보상태에 있던 '강제추방반대센터' 수립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독일 정부는 <강제추방반대센터>가 가진 독일 민족주의적 색깔을 탈각시키고, 범유럽적 차원의 추방반대센터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번드 네우만(Bernd Neuman) 독일 문화 미디어 장관은 독일인 추방은 상설 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20세기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추방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질 것임을 강조했다.[4] 즉 국가대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강제 센터' 수립을 위한 15인 위원회를 설립하며,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새로 발표된 설립 제안서의 모토 "추방을 기억하라, 추방을 인정하라. 화해와 이해를 깊게 해라."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범유럽 차원의 센터라고 해서 문제가

4) *Ibid.*, 2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듯 유럽 공통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즉 트랜스내셔널한 유럽사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연 올바르기만 한 해결책이냐는 점이다. 독일이나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대륙 많은 곳에서 벌어진 범유럽적 문제의 차원에서 강제추방 문제에 접근할 경우,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동유럽과 서유럽간의 억압과 피억압, 지배와 피지배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역사성은 자칫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독일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뿌리 깊은 역사적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한 폴란드 역사에 내재된 집단기억의 비대칭성(asymmetry of collective memory)," "고통의 비대칭성(asymmetry of deprivation)"이라는 문제는 독일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유럽 차원의 강제 추방 센터 건립에 의해서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동유럽으로부터 추방된 것을 유럽에서 이뤄진 다른 강제 추방,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당시의 보스니아 무슬림 추방과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치의 범죄라는 원인과 동유럽에서의 독일인 추방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과오를 금기가 아닌 생산적 담론으로 승화시키기기 위해서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오랜 문제와 다시 한 번 대면하게 된다. 비극적 추방을 일으킨 2차 대전 당시만이 아니라 60여년이 흐는 지금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동·서 유럽 간의 종속 관계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서 화해를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화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논쟁에서 드러나는 동유럽 사회의 민족주의적 배타성과 편협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서 유럽 간의 종속적 관계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라이벤(Vertriebenen)'이라 불리는 독일 실향민뿐만 아니라 '피에-누아(pieds-noirs)'라 불리는 알제리 독립 후 프랑스로 철수한 프랑스인들 같이 서구 식민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서구 실향민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양대, narodna21@hanmail.net